

가격차별

독점기업은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에 다양한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가격차별이 가능하려면 소비자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며, 소비자 그룹 간에 독점시장에서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전매할 수 없어야 한다. 대표적인 가격차별은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다.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은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며 해외에서 구입한 재화나 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할 경우 운송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전매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 다른 가격차별의 사례는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공연 티켓이나 지하철 승차권의 경우 청소년과 일반인 사이에 서로 다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것도 가격차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치재

정부가 개인이나 사회가 충분하게 소비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말한다. 가치재를 시장에 맡겼을 때는 일정 이상의 바람직한 수준까지 소비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며, 가치재의 예로는 교육·의료·운동 등이 있다.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

일상생활에서 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보유하려는 것을 말한다.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소득이 큰 사람이 씀씀이가 더 큰 경향이 있어 화폐 수요도 더 크기 마련이다. 따라서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소득에 비례한다.

거미집 이론

농산물가격은 주기적으로 폭등락을 반복한다. 생산기간이 길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공급의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추의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폭등하였다고 하자. 그 결과 농민들은 고추의 재배면적을 늘려 다음해에 비싼 값에 고추를 판매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해가 되면 늘어난 재배면적 만큼 고추의 공급량이 증가하여 작년 수준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시간에 따른 고추(농산물)의 가격 움직임을 수요와 공급곡선의 평면에 그려 보면 거미집과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여 거미집 이론이라고 한다. 거미집 이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생산량과

공급량이 일치(재고가 쌓이지 않음)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과거의 가격에, 수요자는 현재의 가격에 반응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을 통한 재화의 대체가 가능해서는 안 되며, 생산 기간에 분명한 시차가 존재하여야 한다.

경기변동

단기 실질GDP가 장기적인 평균수준(잠재성장수준)보다 높은 호경기와 낮은 불경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실질GDP(국내총생산)가 변동하는 동안 여러 거시경제 변수들은 실질GDP와 강한 규칙성을 보이며 함께 변동한다. 예를 들면 경기가 호황국면에 접어들면 실질GDP가 장기 평균수준보다 높아진다. 그리고 투자·소비·고용·소득이 증가하고 기업의 상품 공급이 호조를 보이며 재고는 감소하여 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 또한 물가·임금·이자율도 상승한다. 경제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재고가 늘어나면서 후퇴기가 시작된다. 이 시기는 호황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인다. 불황기에 접어들면 소비·투자 등이 침체되고 고용·소득이 감소하며 도산하는 기업들이 발생한다. 물가·임금·이자율 등이 대체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며, 주가도 하락한다. 경기가 저점을 지나면 다시 회복기에 접어들고 이런 주기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경기적 실업

경기가 순환하면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을 말한다.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미국 정부는 대규모 건설 공사를 통하여 실업률을 줄인 바 있는데, 이것이 경기활성화정책의 대표적인 예다. 이 외의 경기부양 정책으로는 세금 감면과 통화량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경기종합지수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동향을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부문별(생산·투자·고용·소비 등)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 지표들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합성하여 작성한 것이다. 앞으로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종합지수,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동행종합지수, 그리고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인 후행종합지수로 구성된다.

경상수지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대가 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 차이를 말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경상수지는 자본수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구성되며, 경제발전 및 정책 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데 널리 이용된다. 특히 상품 및 서비스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하여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하여 줄어드는 것보다 커져 전체적으로는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이는 외화로 외채를 갚거나 주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해외직접투자도 늘릴 수 있다. 또한 물가상승 압력이 있는 경우 수입을 통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성장

장기간에 걸쳐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한 나라의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의 재정활동 그리고 외국과의 거래 결과가 양적으로 확대되면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성장하게 된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본·노동·토지 등 생산요소의 투입이 증가하고 기술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성장률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한 비율로, 일반적으로 실질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로 나타낸다. (실질)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text{경제성장률(\%)} = \frac{\text{금년도 실질GDP} - \text{전년도 실질GDP}}{\text{전년도 실질GDP}} \times 100$$

경제성장률이 양(+)이면 경제 규모가 커졌음을, 음(-)이면 경제 규모가 작아졌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실질GDP가 지난해 100억 원에서 올해 120억 원으로 늘어났다면 이 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0%가 된다.

경제적 유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경제적·사회적·도덕적 보상이 주어질 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보상을 통해 경제 주체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자극을 ‘경제적 유인’ 또는 ‘인센티브(incentive)’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 의욕이 올라가고, 고용주가 성과급을 지급하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여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조사기간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득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즉,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더하면 경제활동인구가 된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다. 취업자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조사기간에 주간에 소득·이익·봉급·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한다. 실업자는 조사기간에 일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수치인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100%로 나타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한 국가의 경제가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의 양을 의미한다.

계절적 실업

날씨·관습·제도 등 계절적인 요인에 의하여 매년 특정시기에 반복되어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대학생이 졸업하는 1~2월과 8월의 실업률은 매년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장마철이나 겨울이 되면 공사현장의 일거리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농부는 농한기에 접어들면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된다. 이와 같은 실업이 계절적 실업의 대표적인 예다.

고령화사회

UN의 규정에 의하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14%인 사회는 '고령화사회', 14~20%인 사회는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정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노인인구가 7.2%를 돌파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영양·건강상태 개선,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 저출산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 및 평균근로연령의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보장비 부담도 증가시킨다.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자/만 15세 이상 인구)×100%로 나타낸다. 실업률이 체감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구직단념자 등이 실업자로 구분되어야 함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률 통계가 실업률보다 고용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탄성치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말하며, '취업자증가율÷실질GDP 증가율'로 산출한다. 즉, 한 경제가 1% 성장하였을 때 고용이 몇 %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 지표다. 고용탄성치가 높을수록 1% 경제성장에 대하여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고용탄성치(고용흡수력)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사무·영업직보다는 생산직에서 고용탄성치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듯 경제성장이 고용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고용탄성치는 더욱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환율제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특정 단일통화나 복수의 통화에 대하여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환율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없어 국제 거래가 촉진될 수 있지만, 지나친 개입으로 환율이 정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경우 극심한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고정환율제로 인하여 다른 나라의 불황이 국내에 파급되기도 한다.

공개시장조작

각국의 중앙은행이 국채나 공채를 시장에서 직접 사고팔면서 경제전체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채나 공채를 사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시중으로 흘러나와 경제전체의 통화량이 증가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국채나 공채를 매수하면 시중에 있던 돈이 유입되어 경제전체의 통화량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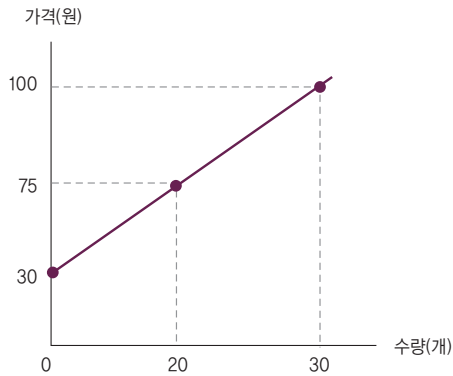
공공재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갖고 있어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국방서비스·도로·항만 등이 대표적인 예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에 양(+)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즉,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소비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재화의 생산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만큼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비배제성 때문에 공공재의 생산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 하면서 소비에는 참여하고 싶어 하는 무임승차자(free-rider)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기능에만 맡기게 되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생산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로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법칙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공급자는 공급량을 늘리려(줄이려) 할 것이다. 이처럼 가격과 공급량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로 인하여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림은 특정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재화를 1개 생산하는 데 30원이 소요된다고 하자. 생산자는 시장가격이 30원을 초과할 때만 해당 재화를 생산할 것이다. 해당 재화의 시장가격이 올라 75원에 이르면 공급자는 공급량을 20개로 늘리고, 100원에 이르면 공급량을 30개로 올릴 것이다. 즉,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자는 공급량을 늘리려

할 것이다. 따라서 공급곡선은 그림과 같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띄게 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가 그 상품의 공급량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서 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e_p = (\text{공급량의 변화 비율} / \text{가격의 변화 비율})$ 이 된다. 농산물은 파종과 수확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반면, 공산물은 인력의 추가 투입을 통해 공급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비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공급의 변화

공급과 공급량의 변화는 생산요소의 가격, 기술수준, 미래에 대한 기대, 생산자의 수 등에 따라 변화한다.

- ① 생산요소의 가격: 원자재, 부품, 건물 임차료, 근로자의 임금 등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공급은 감소(증가)한다.
- ② 기술수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술이 향상되면 동일한 생산요소로 더 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 공급은 증가한다.
- ③ 미래에 대한 기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가까운 미래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급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현재 공급을 줄이게 된다.
- ④ 공급자의 수: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급자의 수가 감소(증가)하면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전체 공급은 감소(증가)한다.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화하면 공급량은 동일한 공

급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하지만 생산요소의 가격, 기술수준, 미래에 대한 기대, 생산자의 수 등이 변화하면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공유자원 / 공유지의 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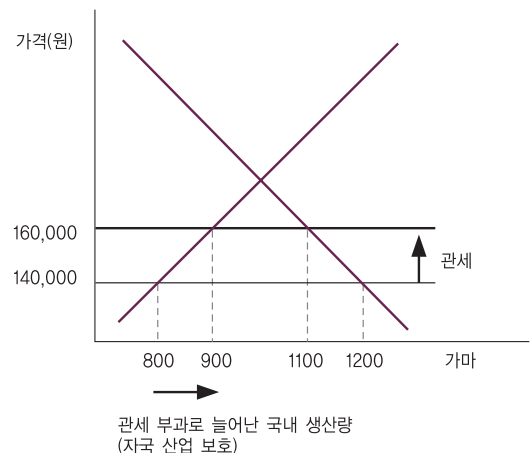
경합성은 있지만 비배제성은 없는 비순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자원을 말한다. 다시 말해 누구나 아무런 대가없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이 추가로 자원의 소비를 늘리면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원 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를 ‘공유자원의 비극’ 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공유자원의 소유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공유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허제 등을 도입하여 배제성을 만들어 줌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과점시장

진입장벽이 독점시장만큼 높지 않고, 둘 이상의 소수 공급자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시장구조를 말한다. 과점시장의 예로 국내의 자동차나 이동통신시장 등을 들 수 있다. 과점시장에서는 생산자들의 숫자가 적어 서로 간에 의존성이 크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 경쟁이 나타난다. 그 결과 매우 경쟁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생산자들끼리 담합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할 경우 독점시장에 가까운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관세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관세는 크게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종가세(ad valorem tariff)와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종량세(specific tariff)로 나눌 수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 수입량이 줄어들게 되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쌀의 국제가격이 14만 원인 상황에서 쌀에 2만 원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쌀의 새로운 시장가격은 16만 원이 되고, 해당 가격에 소비자는 1,100가마 소비를 원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생산자는 900가마만 생산하여 공급하게 되며, 부족한 200가마는 해외에서 수입하게 된다. 국내 생산자는 시장가격 14만 원에 800가마를 생산·공급했지만, 2만 원의 관세 부과로 시장가격 16만 원에 900가마를 생산·공급하게 된다. 2만 원의 관세 부과로 국내 생산자가 100가마를 더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역조건

한 나라의 재화나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것과 교환되는 비율로, 수출과 수입 상품의 가격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수출품 1단위를 팔아서 번 돈으로 수입품 1단위를 살 수 있었다면 교역조건은 1이 된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수출품 1단위를 팔아서 번 돈으로 수입품 0.5단위를 살 수 있다면 교역조건은 0.5가 되고 이 경우 교역조건이 50%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A국가의 교역조건이 개선되었다면 동일한 양의 재화나 서비스를 수출하더라도 종전보다 더 많은 양을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이며, 국제시장에서 A국의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A국가의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면 국제시장에서 A국가의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구매력평가설

환율이 장기적으로 각국 화폐의 상대적인 구매력을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가격이 싼 국가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비싼 국가에서 팔아 이윤을 얻는 차익거래를 통하여 가격이 싼 국가의 가격은 올라가고, 가격이 비쌌던 국가의 가격은 내려가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라면 어디에서나 가격이 같아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 환율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차익거래를 통하여 각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모든 나라에서 같아지도록 결정된다.

구조적 실업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발생하는 실업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주로 기술이 없거나 기술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사양산업의 종사자들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옮겨가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몇 십년동안 손으로 설계도를 그려온 건축설계사가 새로운 컴퓨터 설계 기술을 익히지 못하여 직장을 잃게 되면서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에 해당된다.

국내총생산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총액'을 말하며, GDP(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한다. GDP에서 말하는 영역은 경제활동의 중심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GDP의 조사와 작성은 한국은행이 담당하며 분기·반기·연간 단위로 공표된다. GDP 측정을 통하여 각 국가의 경제규모를 비교하고 경제성장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GDP는 품질 변화와 환경오염 등 삶의 질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또한 지하경제의 포착이 어렵고, 비시장 생산을 포함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국민경제의 순환

가계·기업·정부 등의 경제 주체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분배하고 소득을 지출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한다. 가계는 생산요소시장을 통하여 노동·토지·자본·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지대·이자·이윤의 요소소득을 얻는다. 기업은 생산요소시장에서 구입한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시장에서 판매한다. 가계는 벌어들인 요소소득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한다. 정부는 가계나 기업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출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총생산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을 말하며, GNP(Gross National Product)라고 한다. GNP는 국민경제의 규모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GNP는 국내외 상관없이 해당 국가의 국민이 생산한 것이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국적 개념의 지표인 반면, GDP는 누가 생산했느냐에 상관없이 해당 국가의 영역 내에서 생산한 것이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영토 개념의 지표다. GNP는 현재 측정되고 있는 GDP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

$$\text{GNP} = \text{GDP} - \text{국외지급요소소득} + \text{국외수취요소소득}$$

GDP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요소소득’인 국외지급요소소득을 빼고,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요소소득’인 국외수취요소소득을 더하면 GNP를 구할 수 있다.

국제수지

일정기간 동안 국가 간에 거래된 재화·서비스·자본 등 모든 경제적인 수단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한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된다. 경상수지는 한 국가가 수출한 재화와 수입한 재화와의 금액 차이, 즉 무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품수지(무역수지)와 서비스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서비스수지, 노동(임금)과 자본(이자)의 이용 대가의 결과인 본원소득수지로 나뉜다. 자본·금융계정수지는 자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자산과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구입한 자산을 말하며, 자본계정(수지)과 금융계정으로 구성된다.

국채

정부가 일반 재정적자를 메우거나 재정 자금의 수급 조절, 특정 사업의 재원 조달 등을 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를 말한다. 국채에는 원금·이자·만기 등의 내용이 표시되고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1종 등이 있다. 국채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아 금융상품 가격산정에 있어 기초가 되는 지표금리를 형성함으로써 채권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장기국채 발행은 장단기 금융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금리변동에 대한 높은 가격탄력성을 활용한 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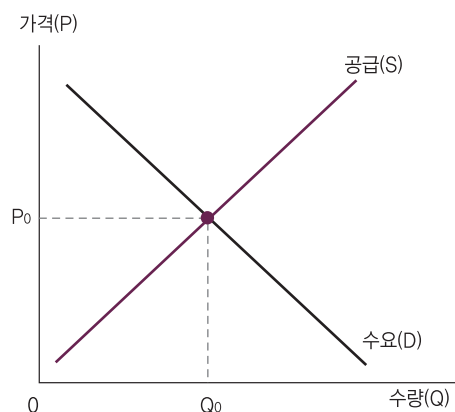
기법의 발달을 촉진하는 등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평균비용이 점차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철도·전기·수도과 같이 초기에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분업에 따른 전문화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기업이 생산규모를 확대시켜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면 경쟁기업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균형가격 / 균형거래량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에 의하여 결정된다. 두 곡선을 한 그래프 안에 그리면 그림과 같이 교차하는 점이 생기는데, 이 점을 균형점(equilibrium)이라고 한다. 균형 상태에서 공급자들은 원하는 만큼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팔 수 있고, 소비자들은 원하는 만큼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균형점에서의 가격, 즉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한다. 또한 균형점에서의 거래량, 즉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거래량을 ‘균형거래량’이라고 한다.



기댓값 / 기대효용

기댓값이란 '확률의 결과가 수의 값으로 나타날 경우 1회의 시행결과로 기대되는 수 값의 크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불확실한 투자 대안의 성공과 실패 확률이 P 와 $1-P$ 라고 하자. 이때 발생하는 투자 수익이 각각 M 과 N 이라면,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댓값을 식으로 나타내면 $(P \times M) + (1-P) \times N$ 이 된다. 불확실성 하에서 소비자의 효용도 기댓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앞의 예에서 투자 수익을 소비자의 효용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대효용은 $P \times U(M) + (1-P) \times U(N)$ 이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는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를 선택하게 된다.

기준금리 / 정책금리

통화당국이 시장금리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금리가 정책금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통화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발표한다. 정책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약칭 기준금리)'라고도 하며,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조절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월 물가동향, 국내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채권(RP: 일정기간이 지난 뒤 확정금리를 보태어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으로, 크게 ①한국은행이 통화조절 수단으로 시중은행에 판매하는 것과 ②금융기관이 수신 상품의 하나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음)을 매매하거나 자금조정을 위하여 예금이나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은 일주일에 한번(매주 목요일)씩만 시장에서 7일 만기 RP를 매매하여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파급경로는 길고 복잡하며 경제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경이 물가에 미치는 크기나 파급시차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리 경로, 자산가격 경로, 신용 경로, 환율 경로 그리고 기대 경로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파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펜재

일반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해당 재화의 소비는 줄어들고 이로 인하여 수요곡선은 우하향의 형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여 수요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띄는 재화가 있는데, 이러한 재화를 기펜재라고 한다. 즉, 기펜재는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감소하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다.

기회비용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대안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택으로 인한 득과 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기회비용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개념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되지 않은 대안 중 가장 큰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졸업 후의 진로로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의 기회비용은 취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근로소득이며, 취업의 기회비용은 대학 진학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위와 그로 인한 미래의 소득 증가 등이다.

노동가능인구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가능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로 정의된다. 노동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개념이다.

노동생산성

투입된 일정한 노동력과 그것에 의하여 얻어진 생산량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본·노동·에너지 등 투입요소의 효율성을 보여준다.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에 대해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생산성의 증가는 동일한 생산요소를 투입해 더 많은 생산량을 얻었거나, 더 적은 생산요소로 동일한 생산량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은 단순히 노동의 생산기여도뿐만 아니라 생산효율성과 기술수준, 한 나라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널리 쓰인다.

대체재

재화를 소비할 때 비슷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두 재화 중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이 줄어들 것이다. 반면 비슷한 다른 재화는 가격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더 많은 수요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한 재화의 가격 상승(하락)이 다른 재화의 수요곡선을 우측(좌측)으로 이동시키면 두 재화는 소비에 있어 대체재다.

더블딥

‘두 번’ (double)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가라앉는다’ (dip)는 단어가 더해진 것으로, 침체에 빠졌던 경제가 짧은 기간 동안 회복하다가 다시 침체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짧은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 마치 W자의 형태와 같고 하여 ‘W자형 경기회복’을 더블딥(이중 침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더블딥 이외에도 경기회복의 속도와 모양을 문자에 빗댄 용어들로는 V자형 경기회복, U자형 경기회복, L자형 경기회복 등이 있다. V자형 경기회복은 경제가 빠르게 침체했다가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경기회복 패턴을 말한다. U자형 경기회복은 침체에 빠진 경제가 천천히 회복하는 것으로, 한번 침체에 빠진 경제가 다시 회복하기까지 작은 부침을 거듭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L자형 경기회복은 침체에 빠진 경제가 좀처럼 그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빗댄 것으로, 일본의 장기 침체기인 ‘잃어버린 10년’이 L자형 경기회복의 전형이다.

도덕적 해이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의 거래 및 계약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건강 유지를 위한 활동을 게을리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독점시장

독점이란 완전경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산업에서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1인 또는 1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의 경쟁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시장은 공급자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을 결정하는 시장으로, 생산자 간의 경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생산자의 생산량 조절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경쟁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고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다. 독점시장은 기본적으로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발생한다. 구조적인 진입장벽은 기존 기업이 비용 또는 마케팅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주로 초기 고정투자비용이 매우 큰 전력·수도 등의 대규모 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연독점과 기존의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와 같이 사용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해당된다. 법적인 진입장벽은 기존 기업이 특허나 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보호받는 경우가 해당되고, 전략적인 진입장벽은 기존 기업이 신규 진입 기업이 이윤을 얻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진입을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독점적 경쟁시장

다수의 공급자가 매우 유사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시장구조다. 음식점, 미용실 등과 같이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지만 각각 자신만의 특화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생산자들은 주로 제품의 차별화 전략을 통한 경쟁에 치중하게 되어 같은 재화나 서비스라도 각 생산자마다 상표·디자인·품질·결재방식·A/S 등에서 어느 정도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각 생산자들은 특징적인 차이를 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며,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특정 생산자의 재화나 서비스에 단골 고객이 된다.

디노미네이션

화폐의 가치를 변동시키지 않고 모든 은행권과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수치로 표현하거나 새로운 통화 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다. 예를 들어 현재 1,000원권 지폐를 1원으로 변경하면 1만 원권 지폐는 10원이 된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거래 단위를 표시하는 화폐의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져 계산이나 회계장부 작성, 현금 결제 등이 크게 불편해졌을 경우 거래시 편의를 제고하고 회계장부의 기장 처리를 간편화할 수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고 자국 통화의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은 좋은 디플레이션과 나쁜 디플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좋은 디플레이션은 기술진보 등으로 총공급이 늘어나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이다. 이 경우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생산성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기업의 이윤이 줄지 않아, 경제성장 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총수요가 감소해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연결된다. 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는 하락하고 생산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업 이윤도 줄고 기업이 부담하는 부채의 실질가치가 커진다. 기업이 도산하면 실업이 늘어나고 경기침체는 더욱 악화된다.

레몬시장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을 통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정부의 개입 없이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항상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시장참여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asymmetry) 때문에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신용이 우수한 고객들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신용이 불량한 고객들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이 좋은 고객에게 부과하는 금리와 신용이 좋지 못한 고객에게 부과하는 금리의 중간 정도를 모든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이 좋은 고객은 시장을 떠나고 신용불량자만이 남게 되며, 금융회사는 이들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빠지게 된다. 미국의 이론 경제학자인 조지 애컬로프(George A. Akerlof)는 시장참여자 간에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불균형을 이루어 역선택이 발생하고, 사회 전체의 효용이 저하되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가리켜 ‘레몬시장’이라고 하였다.

로렌츠곡선

인구 누적 점유 비율에 상응하는 소득 누적 점유 비율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로렌츠곡선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가로축은 누적된 인구의 백분율을, 세로축은 누적된 소득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만약 어느 한 점의 가로축이 25%, 세로축이 10%를 가리키고 있다면 소득 기준 최하위 25%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1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소득을 평등하게 점유할수록 곡선은 대각선에 가깝고,

극단적으로 불평등하다면(마지막 한 사람이 사회의 모든 소득을 점유) 수평선을 따라가다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모양의 로렌츠곡선이 그려진다.

마찰적 실업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에 맞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발생한다. 지금의 직업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의미에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마찰적 실업은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물비용

일단 지출하고 나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매물비용은 더 이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한 장에 10만 원 하는 월드컵 축구 경기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경기 관람의 효용이 10만 원보다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다. 재발급과 환불이 불가능한 입장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처음 입장권 구매를 위하여 사용한 10만 원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는 분실한 입장권은 매물비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 관람의 효용이 여전히 10만 원보다 큰 만큼 다시 입장권을 구매하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명목GNI / 실질GNI

국내총생산(GDP)이 경제주체의 국적에 상관없이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것이라면, 국민총생산(GNP)은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느냐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의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나타낼 경우 GDP보다 GNP가 더 적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 또는 국내총소득을 나타내는 GDP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요소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을 빼고, 자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요소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을 더하면 GNP가 된다. 이때 국내 생산요소가 외국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대가로 받은 소득은 ‘국외수취요소소득’이고 반대의 경우는 ‘국외지급요소소득’이다.

양자의 차이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며 GNP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begin{aligned} \text{GNP} &= \text{GDP} + \text{국외순수취요소소득} - \text{국외지급요소소득} \\ &= \text{GDP} + \text{국외순수취요소소득} \end{aligned}$$

하지만 지금은 GNP라는 항목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이 대신하고 있다. 즉, 명목GNI는 명목GNP와 같은 뜻이다. 그러나 실질GNI는 실질GNP와 같지 않으며 실질GN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더하여 계산한다.

$$\begin{aligned} \text{실질GNI} &= \text{실질GNP} + \text{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무역손익} \\ &= \text{실질GDP} + \text{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 &\quad \text{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무역손익} \end{aligned}$$

미소금융

신용이나 담보 문제로 인하여 일반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소액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 대출사업이다. 대출에 따른 수익보다는 금융기관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등 각종 대출조건이 대출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된다.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농촌과 도시지역의 영세사업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무하마드 유누스가 그라민은행을 만들어 농촌 빈곤여성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변동환율제

환율이 외환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정부나 중앙은행 등에서 간섭을 하지 않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이론적으로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때 환율이 즉각적으로 조정되어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국제수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변동환율제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른 통화량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를 절충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을 유지하더라도 일부 환율의 변화를 인정하는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나 기본적으로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다.

보완재

커피와 설탕,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 한 재화나 서비스를 별도로 소비할때 보다는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가져다주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한 재화의 가격 상승(하락)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을 줄이고 다른 재화의 수요곡선을 왼쪽(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두 재화는 소비에 있어 보완재다.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 조사기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의 인구, 예를 들어 집안에서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는 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은 연로자 그리고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을 일컫는다. 통계청에서 조사·발표하는 실업률 통계는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통계에서 제외된다.

비교우위

한 나라가 국제무역에 있어서 모든 교역 대상 품목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더라도 최소한 하나 이상의 특정 상품에 있어서는 상대국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상대국이 특정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한 국가가 상대국보다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을 특화하여 교역하면 두 나라 모두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국과 을국 두 나라가 자동차와 쌀 두 가지 재화를 생산한다고 하자. 각 재화의 기회비용은 표와 같다.

| | 자동차 1대 생산의 기회비용 | 쌀 1가마 생산의 기회비용 |
|----|-----------------|----------------|
| 갑국 | 쌀 1/3가마 | 자동차 3대 |
| 을국 | 쌀 2가마 | 자동차 1/2대 |

자동차 1대를 생산하기 위하여 갑국은 쌀 1/3가마를, 을국은 쌀 2가마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갑국의 기회비용이 을국보다 작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는 갑국이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쌀 1가마를 생산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을국의 경우 자동차 1/2대, 갑국은 3대이므로 쌀 생산은 을국이 갑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 따라서 두 나라는 각각 기회비용이 더 작은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즉 갑국은 자동차 생산을 특화하고 을국은 쌀 생산을 특화하여 서로 교환하면 갑과 을국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빅맥지수

전세계 각국에서 판매되는 빅맥 햄버거의 가격을 바탕으로 구매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말한다. 구매력평가설에 의거하여 빅맥 가격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같다고 가정 한 후 각국의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여 얻은 환율과 실제 환율을 비교하여 저평가 혹은 고평가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빅맥의 가격이 3,600원이고 미국에서는 3달러라고 하자. 이 경우 빅맥지수 환율은 1,200원/달러가 된다. 이때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이 1,220원/달러라면 현재 원화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유재(사적재)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배제성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은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는 것을, 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해당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타인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유재는 값을 치른 사람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다. 사유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와 대비되며, 일반적으로 재화의 대부분이 사유재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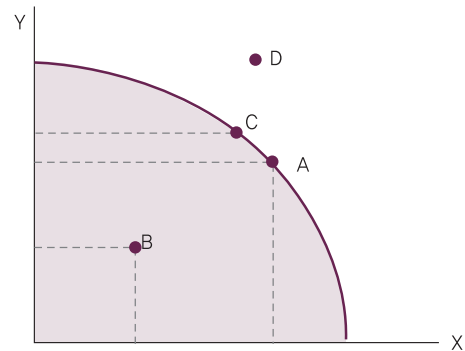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재화나 서비스가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상계관세는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되며, 강력한 무역구제 조치로 꼽힌다.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은 가격이 낮아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해당 산업의 시장을 잠식당하는 타격을 받게 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수출국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상쇄하도록 상계관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기본관세 이외에 장려금이나 보조금만큼 더해져 산정되며, 부과요건은 생산 및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장려금·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나 이러한 수입품에 의하여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생산가능곡선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서 $X \cdot Y$ 두 재화만을 생산하고, 각 산업에서는 이 경제에 존재하는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한다면 그림과 같은 생산가능곡선이 나타난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생산가능곡선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우하향하고,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밖으로 볼록한 형태를 띤다. 생산가능곡선상의 모든 영역(A와 C)은 부존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를 나타내고, 생산가능곡선 내부의 영역(B)은 부존자원이 일부 사용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반면 생산가능곡선 바깥의 영역(D)은 현재 부존자원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재화의 조합을 의미한다.

[그림] 생산가능곡선



생산자물가지수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내놓는 재화나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수다. 2011년 현재 생산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는 2005년이며 조사 대상품목은 884개(재화 801개, 서비스 83개)이다. 조사대상이 되는 품목들은 중요도에 따라 각기 다른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생산자 잉여

생산자가 시장에서 거래를 하여 얻게 된 이익이다. 생산자가 실제 판매한 금액에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을 뺀 가격이다. 어떤 생산자가 배 하나에 2,000원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2,500원에 팔았다면 생산자 잉여는 500원이다.

생애소득가설

사람들은 일생동안 기대되는 수입 및 부의 총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 소비한다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늘어나는 청년기나 장년기에는 은퇴 이후를 고려하여 소비를 줄여 저축을 하고, 은퇴 이후 노년기에는 근로소득이 없으나 이전에 저축한 돈으로 종전과 비슷한 소비를 유지하게 된다. 이전에는 소득의 크기가 소비와 저축을 결정(절대소득가설)한다고 보았으나 생애소득가설 때문에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저축률이 왜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연금이 장래에 어떤 효과를 낼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소득재분배정책

정부가 고소득층의 소득 일부를 저소득층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정부는 누진세와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누진세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득격차를 줄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생활안정 측면에서 보험의 성격이 강하여 부수적인 재분배 효과만을 나타내는데 비하여 공공부조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돕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뚜렷한 재분배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재분배정책은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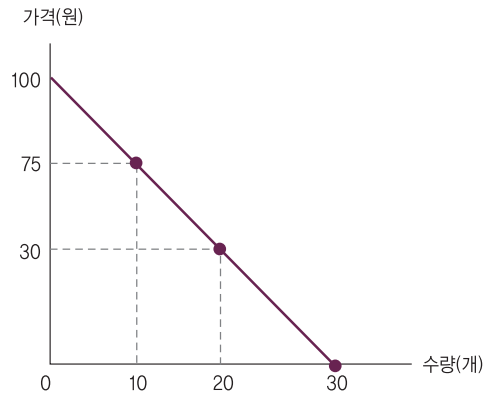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지수

서울을 비롯한 36개 주요 도시의 가게가 소비하는 대표적인 소비재 500여개의 가격을 포함하여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잡고 비교 시점의 물가를 백분비로 표시한 지수다. 개별품목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한다. 소비자들은 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를 늘리거나 줄이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고정된 품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체감물가와 괴리가 있다.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대체재를 선택하는 대체효과도 고려하지 못한다.

소비자 잉여

소비자가 시장에서 거래를 하여 얻게 된 이익을 말한다.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하여 지불할 의사에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가격이다. 어떤 소비자가 사과 하나에 2,00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에서 1,500원에 구입했다면 소비자 잉여는 500원이다.

수요법칙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소비자들은 해당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일(늘릴) 것이다. 이처럼 가격과 수량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되며, 이로 인해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림은 특정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0일 경우, 소비자는 해당 재화를 30개 소비한다. 그러나 가격이 30원으로 오르면 소비자는 소비량을 20개로 줄이고, 75원으로 오르면 소비량은 10개로 줄어든다. 가격이 100원에 이르면 소비자는 해당 재화를 전혀 소비하지 않는다. 즉,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소비자는 소비량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그림과 같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띄게 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변화가 수요량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서 구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e_p = (\text{수요량의 변화비율} / \text{가격의 변화비율})$ 이다.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총수입이 늘어난다. 반면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는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가격이 내려가도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총수입은 줄어든다. 탄력성이 1이면 단위탄력적이라고 하며, 이때 총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크기는 대체재가 많거나 장기로 갈수록 더 커진다. 또한 전체 지출 가운데 해당 재화나 서비스가 차지하는 지출이 클수록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수요자의 소득, 수요자의 기호, 수요자의 수, 미래에 대한 기대, 정부정책 등에 따라 변한다.

- ① 다른 재화의 가격: 대체재의 관계에 있는 두 재화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증가)한다. 그러나 보완재 관계에 있는 두 재화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는 증가(감소)한다.
- ② 수요자의 소득: 대부분의 재화는 소득이 증가(감소)하면 수요가 증가(감소)하며, 이러한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다. 소득이 증가(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재화는 '열등재'라고 한다.
- ③ 수요자의 기호: 수요자의 기호나 선호가 높은(낮은)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는 증가(감소)한다.
- ④ 수요자의 수: 수요가 가능한 소비자의 수가 증가(감소)하면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감소)한다.
- ⑤ 미래에 대한 기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미래 특정 시점에 상승(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현재 수요는 증가(감소)한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은 동일한 수요곡선 상에서 이동하지만 다른 재화의 가격, 수요자의 소득, 수요자의 기호, 수요자의 수, 미래에 대한 기대, 정부정책 등이 변화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여 수요량에 변화를 준다.

스넵효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을 말한다. 스넵효과는 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할 때 나타난다. 독특한 것을 소비하여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마치 백로 같다고 하여 백로효과라고도 한다. 스넵효과가 있으면 없을 때에 비해 개별수요가 작아지고 시장 수요 또한 작아진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침체하여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정체·침체를 뜻하는 '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inflation'의 합성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모두 상승하므로 국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크게 증가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확장정책을 실시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기 쉽고, 반대로 물가안정을 위하여 긴축정책을 실시하면 실업률이 단기적으로 상승하기 쉽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승자의 저주

승자의 저주는 케이펜, 클랩, 캠벨 3명의 기술자가 1971년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다. 석유회사들이 채굴권을 얻기 위하여 경매를 실시하였는데, 경매가 종료된 후 경매에서 승리한 기업들이 사후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였다. 비록 경매에서 이겼지만 경매가격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불렀거나, 실제가치보다 낮게 불려서 손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기대했던 수익보다 이익이 낮게 발생하여 상실감을 느낀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승자에게 내려진 저주와 같다고 하여 '승자의 저주'라고 불린다. 처음에는 경매에서 승리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설적인 상황을 두고 승자의 저주라고 불렀지만, 최근에는 치열한 경쟁의 결과 승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경쟁의 과실이 생각보다 적은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도 사용되고 있다. 승자의 저주를 '승자가 패자에게 내리는 저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그 반대의 상황을 나타낸다. 승자는 저주를 내리는 주체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 대상이 된다. 시장점유율 싸움에서도 승자의 저주는 자주 사용된다. M&A를 통하여 기업의 규모를 키우거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지만, 경쟁 과정에서 무리하게 M&A를 시도하였거나 성급한 성장정책을 사용하여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도 승자의 저주가 나타났다고 한다. 최근 도요타의 무리한 확장정책으로 인한 리콜사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규모를 키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시장실패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저하되고,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현상을 말한다.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불완전경쟁,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 정보의 불확실성 및 비대칭성 등이 있다. 시장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 그러나 시장실패가 나타난다는 것은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뿐 공평한 자원 배분과는 관계가 없다.

신용창조

은행의 대출에 의하여 최초 예금액 이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며, 예금창조라고도 한다. 지급준비율이 10%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만일 갑이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예금자의 인출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을 을에게 대출한다. 이때 시중의 통화량은 예금된 갑의 100만 원과 을에게 대출한 90만 원을 합한 190만 원이 된다. 이후 을이 대출한 9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면 은행은 또 지급준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누군가에게 다시 대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애초에 100만 원이었던 통화량이 몇 배로 증가하게 된다.

실업률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실업은 크게 경기상황의 변동(경기적 실업), 노동 수급구조의 변동(구조적 실업), 정보의 불일치(마찰적 실업), 계절적 요인(계절적 실업)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취업과 실업의 구분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임시고용과 일용직 등도 취업자로 분류되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는 실업통계에서 제외(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업보험제도

비자발적 실업자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실업급여(취업 당시 급여의 일정비율)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을 줄여주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중에 근무를 태만하게 할 수 있고, 실업기간에도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실업보험 지급기간도 제한하고 있다.

실업자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펼쳤으나 1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국제기준에 따른 구직활동은 취업을 위하여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 직업소개소에 등록한 경우, 취업대상 기업을 방문하거나 주변인에게 취직을 부탁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10분위 분배율

소득분배를 판별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지니계수에 비하여 체계적인 평가방법은 아니지만 단순성 때문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소득계층의 최하위 40%가 차지하는 소득을 최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0과 2사이의 값을 갖는다.

쌍둥이 적자

재정수지 적자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재정수지는 클린턴정부 시기에 흑자를 이루었으나, 부시정부 들어 지속적인 적자를 보였다. 경상수지 또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수출을 초과하여 적자를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쌍둥이 적자는 당사국인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큰 불안요인이 되었다. 쌍둥이 적자는 정부 지출 보충과 초과수입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막대한 국제발행과 외국자본의 유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의 금리 인상은 회복단계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웃소싱

기업을 경영하면서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 공정의 일부나 관리의 일부분을 외부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할 때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인력공급업체의 도움을 받으면 채용의 번거로움도 덜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공장에서 타이어, 유리창, 의자, 시트 등 생산 공정의 일부를 외부에 맡기면 생산관리가 쉽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양적완화

중앙은행이 단기금리인 정책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하였을 때,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국채매입을 통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양적완화'에서 '양적(quantitative)'은 특정한 양의 통화 가 새로 창출된다는 뜻이고, '완화(easing)'는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대출여력을 제공함으로써 신용경색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국채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는 곧 국채 수익률(이자율)의 하락을 의미한다.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 기타 자산의 금리도 함께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차입비용이 감소한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양적완화는 소비와 투자의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기대효과가 있다. 하지만 양적완화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과잉 유동성으로 자산가격에 버블을 형성할 우려도 있다. 양적완화정책이 처음으로 실시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이 붕괴하면서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빠지자 일본은행(Bank of Japan)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제로수준까지 인하하였다. 하지만 경기가 좀처럼 부양되지 않고 디플레이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자 일본은행은 2001년 3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양적완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정책은 5년간 유지되다 2006년 3월 해제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른 국가들도 경기부양을 위하여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8년 11월 1차 양적완화(QE1)정책을 시행하였고, 2010년 11월에 발표된 2차 양적완화(QE2)정책은 2011년 6월 종료되었다.

역선택

거래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은행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돈을 잘 갚을 사람이라면 은행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줄 것이고, 돈을 안 갚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면 높은 위험 부담의 대가로 높은 이자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대출자의 정보가 부족하여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힘들다면 은행은 평균 수준에 맞춰 대출 금리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돈을 잘 갚을 우량고객은 이자가 높아 대출받기를 꺼리게 되고,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만 대출을 받고자 하여 신용이 낮은 고객들과만 거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역선택이라고 한다.

열등재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득이 늘어나 버스 대신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한다면 이용 횟수가 줄어드는 버스는 열등재라고 볼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

진입장벽이 없어 무수히 많은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낮은 가격에 많은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완전경쟁시장의 성립 요건으로는 시장의 진입과 탈퇴의 자유, 무수히 많은 공급자, 동질적인 재화와 서비스, 완전한 정보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완전고용

현재의 실질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거나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가 모두 고용되는 상태로,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완전고용 상태의 실업률이 0%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는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과 산업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이 존재할 때 해당 경제는 완전고용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실업률이 3~4% 정도면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외부효과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지만, 그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가용을 이용하면 교통 혼잡을 증가시켜 제3자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주게 된다.

외환보유고

한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총액, 즉 대외지급준비 외화자산을 말한다. 외환보유고는 한 국가의 대외신용도를 유지하고 환율 시장과 국제수지를 안정시키는 데 사용된다. 민간은행이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자산은 외환보유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적외화보유액'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국내 또는 외국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금 또는

다른 국가의 채권으로 보유하기도 한다.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고 국가신용도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등 유지비용이 늘어나고 국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외환보유고를 특정 자산으로 보유하는 비율을 줄이고 외화자산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 함정

경기 부양을 위하여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1920년대 대공황 시절 통화량을 늘렸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금리가 아주 낮은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채권을 매입하는 공개시장조작으로 시중에 돈을 풀더라도 화폐수요에 흡수되어 금리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금융당국이 이자율을 아무리 내려도 기업들의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윤극대화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여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말한다. 기업은 생산물을 팔아서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생산요소의 대가로 지불한 비용을 뺀 나머지인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을 벌인다.

이자율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한다. 이자란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기간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자율은 자금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며,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의 성격에 따라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로 나뉘고, 거래되는 자금의 계약기간에 따라 장기이자율과 단기이자율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단기자금시장인 콜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 금리가 콜금리다. 가산금리란 채권할인율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에 덧붙이는 추가적인 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위험에 대하여 가중되는 금리를 말하며 스프레드(spread)라고도 한다. 한편 현재의 소비를 위하여 지출하는 대신 미래의 소비를 위하여 저축을 하면 이자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자는 현재소비의 기회비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소비자에게 이자율은 현재와 미래 사이의 소비량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인플레이션

물가수준이란 여러 가지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므로 화폐가치가 하락한다. 인플레이션은 발생 원인에 따라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과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 증가, 민간투자 증가,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는 통화 가치 하락과 구매력의 약화가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수준의 변화율, 즉 $CPI(Consumer's Price Index, 소비자물가지수)$ 로 측정된 물가수준의 변화율로 정의된다. 2010년의 CPI가 125.0, 2011년의 CPI가 130.0이라고 가정하면, 이에 따른 2011년의 인플레이션율은 물가수준의 변화율인 $(130-125/125) \times 100\% = 4\%$ 다.

자동안정화장치

경기의 상황에 따라 재정지출이나 조세 징수액이 자동으로 조절되어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소득이 줄어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실업자가 증가되면 실업보험제도에 의하여 정부지출이 늘어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완화시킨다. 반면 호황기에는 소득이 증가하여 세수의 증가를 가져오고 실업자 감소로 실업보험금 지급은 줄어들게 되는 등 재정지출이 축소된다.

자연독점

시장 전체 수요를 여러 생산자보다 하나의 생산자가 맡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장조건이다. 예를 들어 전기·전화·수도 등은 대량 생산할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특성 때문에 독점이 생겨난다. 한 기업이 전력·전화·수돗물 공급을 독점할 때 가장 싼값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독점의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연독점기업이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자연실업률

1968년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이 제시한 개념으로, 프리드먼은 경제의 균형상태에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 등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업률 수준을 자연실업률이라고 하였다. 장기적인 의미에서 자연실업률은 경제가 모든 충격에 대한 조정과정을 거친 후 갖게 되는 실업률로, 물가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효율성, 근로유인과 관련된 제도, 경제주체의 선호 변화, 생산성의 변화 등이 있다. 자연실업률과 실제 실업률과의 차이를 ‘실업률 갭’이라고 하며, 이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잠재성장률

한 나라의 경제가 노동·자본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능력이다. 완전고용 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로, 잠재성장률이 4%라고 하면 물가상승을 초래하지 않고는 4%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잠재성장률과는 달리 한 나라의 경제가 실제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는 실질성장률이라고 한다. 경기 호황으로 생산요소들이 정상수준 이상 활용되면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게 되며, 이 경우 경기과열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생산요소의 활용정도가 정상수준 이하가 되면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게 되며, 실업이 늘어나고 기계 등 자본설비가 최대의 효율을 낼지 못하는 유헴상태가 발생한다.

재정정책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발생하는 세입과 국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세출을 통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한다. 이때 총수요는 감소하는데, 이를 통하여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반대로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늘리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이 경우는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통하여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할인율

재할인이란 고객이 제시한 약속어음을 시중은행이 할인하여 자금을 공급한 후 시중은행이 이 어음을 중앙은행에 제시하여 다시 할인받아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중앙은행이 어음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적용하는 할인율(이자율)이 재할인율이다. 재할인율이 내려(올라)가면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늘릴(줄일) 것이다. 이는 통화의 공급(환수)되는 것으로, 통화량 증가(감소)를 의미한다.

절대우위

한 경제주체가 다른 생산자보다 더 적은 양의 자원을 사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갑국과 을국이 자동차와 쌀, 두 가지 재화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갑국은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데 노동자 5명, 쌀 1가마를 생산하는데 노동자 15명이 필요하고, 을국은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데 노동자 40명, 쌀 1가마를 생산하는데 노동자 20명이 필요하다. 을국은 자동차 1대를 생산하기 위하여 갑국보다 35명의 노동자가 더 필요하고, 쌀 1가마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갑국에 비하여 5명의 노동자가 더 투입되어야 한다.

| | 자동차 | 쌀 |
|----|-----|-----|
| 갑국 | 5명 | 15명 |
| 을국 | 40명 | 20명 |

갑국이 자동차와 쌀 생산 모두에서 더 적은 노동력으로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갑국이 두 재화의 생산 모두에서 을국에 비하여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절약의 역설

개인의 입장에서는 절약하여 저축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구성의 오류다.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기 위하여 소비를 줄이면 총수요가 줄어들고, 총수요가 줄어들면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절약의 역설은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을 때 절약이나 저축 증대가 오히려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90년대에 경기침체를 겪었는데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인 것이 경기침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정보의 비대칭

거래나 교환 등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가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중고차는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엔진 등 내부 보이지 않는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 경력이 많은 차일 수도 있다.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자신이 팔고자 하는 자동차의 품질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중고차의 품질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 경우 구매자가 정보의 부족으로 나쁜 제품의 중고차를 제값 이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 유통되는 중고차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구매자는 중고차 구입 자체를 꺼리게 되고 중고차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상황을 보면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제품에 관한 정보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한다. 보험시장, 주인-대리인 문제 등도 정보의 비대칭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한다.

정부실패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실패의 원인을 치유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에 빗대어 정부실패라고 한다. 한정된 정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고려, 예측할 수 없는 민간의 반응,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등은 정부실패의 요인이 된다. 정부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철폐하고, 경쟁원리와 적절한 유인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상재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돼지고기를 주로 먹던 사람이 소득이 증가하여 돼지고기의 소비를 줄이고 쇠고기의 소비를 늘렸다면 쇠고기는 정상재이다.

조세

정부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정부의 조세인 지방세로 나뉜다. 또한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도 분류된다. 직접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뛰어나고 담세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세 저항이 강하고 징수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비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조세의 역진성).

종합주가지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 종목의 주가변동을 종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를 말한다.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로 증권거래소가 산출한다.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이날의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정하고 이에 대비한 매일의 주가지수가 발표된다. 종합주가지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가치가 기준시점과 비교할 때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나타낸다. 한편 신규상장,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일반적인 주가변동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시가총액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는 주가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준시가총액을 수정하게 된다(*출처: 한국거래소 경제용어사전).

주식

기업의 이윤과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기업은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공급자들은 구매를 통하여 보유한 주식 수만큼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주주'가 되고 주식발행을 통하여 설립된 회사는 주식회사가 된다. 따라서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금액의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주권으로서의 뜻이 있다. 주식의 가격을 주가라고 하며, 주가는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급준비율

시중은행들은 고객이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이를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며, 지급불능 사태를 막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고객의 예금 중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이 지급준비율이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시중은행들은 예치해야 할 금액이 많아지므로 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하여 통화량이 감소한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시중은행의 대출 여유가 커져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조절을 통하여 은행의 운용 자금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시장조작, 금리정책과 함께 유력한 금융의 양적 조절수단으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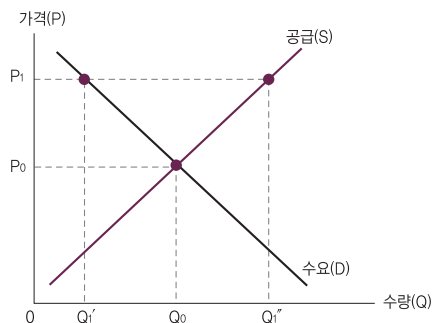
지니계수

사회의 소득분배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가 개발하였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로 표시된다. 소득분배가 완전 평등한 상태일 경우 0이 되고, 소득분배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이면 1이 된다.

채권

기업이나 정부 혹은 금융기관 등이 장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자본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채권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를 약속한 일종의 차용증서로, 돈을 빌려주는 금액 · 기간 · 금리 · 만기 등이 명시되어 있다. 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주식과 달리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업의 영업성과에 관계없이 일정한 이자를 받는다. 채권 가격은 채권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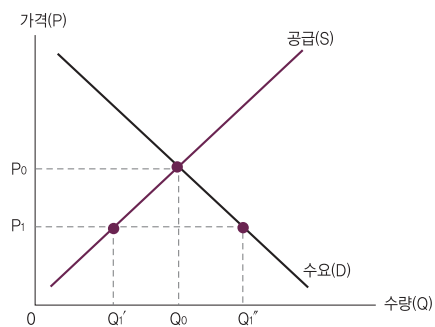
초과공급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해당 재화의 물량이 남아도는 상태를 말한다. 균형가격이 P_0 일 때 균형거래량이 Q_0 인 재화가 있다고 가정하자. 시장에서 해당 재화가 균형가격보다 높은 P_1 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때의 수요량은 Q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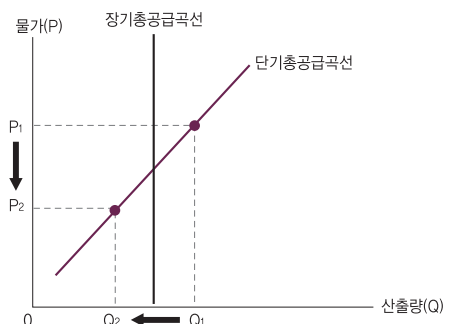
이고 공급량은 Q_2' 이다. 해당 재화에 대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였으므로 시장에는 해당 재화가 남아돌게 된다. 이 경우 공급자들은 P_1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 해당 재화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공급자들은 재화의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격을 내릴 것이며, 이로 인하여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하여 결국 균형가격과 시장가격이 일치하게 된다.

초과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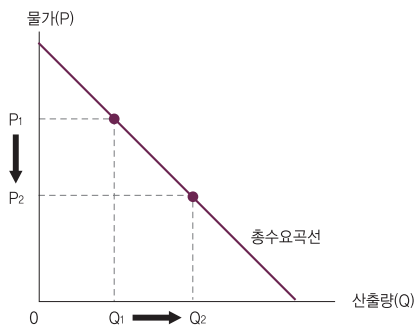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해 해당 재화의 물량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균형가격이 P_0 일 때 균형거래량이 Q_0 인 재화가 있다고 가정하자. 시장에서 해당 재화가 균형가격보다 낮은 P_1 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때의 공급량은 Q_1' 이고 수요량은 Q_2' 이다.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였으므로 시장에서 해당 재화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P_1 가격에서 원하는 만큼 해당 재화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은 증가하여 결국 균형가격과 시장가격이 일치하게 된다.

총공급



한 시장에서 생산자가 생산하려고 하는 수량을 시장의 공급이라고 한다면, 한 나라의 모든 생산자들이 생산하려고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총공급이라고 한다. (단기)총공급곡선도 한 시장의 공급곡선과 같이 우상향한다.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총공급곡선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반영한다. 따라서 기업들의 생산조건에 변화가 오면 총공급곡선이 움직인다. 예를 들어, 유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올라가 총공급곡선이 좌측 또는 위로 이동한다. 반면, 신기술이 개발되면 같은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공급곡선은 우측 또는 아래로 이동한다.

총수요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한 나라의 경제주체 전체가 소비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말한다. 즉,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기업·정부가 소비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다.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자산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총수요는 증가한다. 물가수준의 하락은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 경우 기업과 가계의 투자가 증가하여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또한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환율 하락을 불러와 수입이 줄고 수출은 늘어 총수요는 증가한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총수요곡선은 그림과 같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총수요곡선은 국내총생산($GDP=Y$)의 구성요소인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NX)의 변동에 따라 이동한다.

최고가가격제(가격상한제)

가격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게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최고가격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낮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 최고가격이 설정되면 수요량이 늘고 공급량이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이

로 인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품귀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물건을 사기 위하여 줄을 선다든지 오히려 시장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암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부작용이 일어난다.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로,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게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가격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 유효한 최저가격이 설정되면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인하여 실업을 초래하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

취업자

일반적으로 직업을 갖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 조사기준에 따르면 취업자는 조사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본인의 가구에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것을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조사기간 중 질병·휴가·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등이다.

캐리트레이드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여 금리가 높은 국가의 채권·주식·원자재·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캐리트레이드의 투자수익은 두 통화 간 금리 차이와 환율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의 금리가 2%이고 미국의 금리가 0.25%라고 가정하자. 투자자는 두 국가 간 금리의 차이인 1.75%p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캐리트레이드의 경우 환율 변동도 고려해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투자를 결정할 때는 1,000원이었는데 투자를 회수할 때 1,100원으로 상승한다면 원화 가치가 10% 하락한 것이므로 금리 수익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를 기준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코즈의 정리

경제주체들이 협상을 통하여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A건설사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B의 조망권이 피해를 입자 B가 A건설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였다고 가정하자. A건설사는 신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B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신축할 것이다. 하지만 B에게 지불해야 할 보상금이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면 A건설사는 건물 신축을 포기할 것이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시장은 스스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호사 비용 등 협상을 위하여 필요한 거래비용이 당사자들의 이익보다 클 경우 협상은 종종 결렬될 수 있다. 또한 협상당사자의 수가 많거나 파업 등 협상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의 경우 타협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콜금리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부족한 것을 막기 위하여 콜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말한다. 단기자금이 풍부한 금융기관이 여유자금을 콜시장에 내놓으면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이를 빌려간다. 이때 자금을 빌려간 금융회사에게 부과되는 금리가 콜금리다. 각 금융기관들의 자금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콜금리는 전체 자금시장의 상태를 반영하며, 회사채 수익률과 함께 시장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글로벌시장에서 제도화되었다. 온실가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탄소배출권거래제도'라고 이름 지어졌다. 각국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남은 양만큼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다. 배출권의 매매는 탄소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배출권을 사고 팔 때는 양 당사자가 희망매입·매도가격을 제시하고, 조건이 맞는 경우 거래가 성사된다. 2009년 기준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1,5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2005년에 비하여 14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2005년 108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2006년 312억 달러, 2007년 630억

달러, 2008년 1,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테일러 준칙

미국의 경제학자 존 테일러가 미국의 연방준비기금 기준금리 결정을 분석한 후 발견한 기준금리의 규칙을 말한다. 테일러 준칙은 다음과 같다. π 는 물가상승률이며, GDP갭은 자연율 수준의 GDP와 현재 GDP의 차이다.

$$\text{기준금리} = \pi + 2.0 + 0.5(\pi - 2.0) - 0.5(\text{GDP 갭})$$

만약 물가상승률이 2%이며 GDP 갭이 0이라면 기준금리는 4%가 되어야 한다. GDP 갭이 0인 상태에서 물가상승률이 3%라면 기준금리는 5.5%가 되며, 물가상승률이 1%라면 기준금리는 2.5%가 된다. 물가상승률이 2%인데 GDP 갭이 1%라면 기준금리는 3.5%가 되며, GDP 갭이 -1%라면 기준금리는 4.5%가 된다. 즉 생산이 자연율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금리가 하락하고, 자연율 수준을 상회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테일러 준칙은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과 GDP 갭에 따라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며, 식의 0.5는 인플레이션과 GDP 갭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낸다.

통화량

통화는 유통화폐의 준말로, 거래에서 지급되고 유통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지닌 화폐를 말한다. 다시 말해 통화는 지불 및 상업적인 유통 단위를 뜻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통화량은 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화폐의 총액으로,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거래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화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화량의 변동은 이자율에 영향을 미쳐 소비 등 실물변수에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증권을 말한다. 흔히 '통안증권' 또는 '통안채'라고 한다. 통화 수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시장에서 통화안정증

권을 발행하여 시중의 남은 유동성을 흡수하고, 반대로 통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환매하거나 만기 전에 상환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전체적인 통화량을 조절한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총 통화(M2)의 50% 이내로 결정한다.

통화정책

금융당국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폐 공급, 유용성, 화폐가치, 금리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금융정책' 또는 '통화금융정책'이라고도 불린다. 통화정책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업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한다. 금융시장 및 제도를 안정시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 또한 통화정책을 펴는 이유이다. 통화정책은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하고 이에 맞춰 통화량을 조절하면 금융시장에서 콜금리, 채권금리, 은행예금 및 대출금리 등이 변동하게 된다.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

케인즈는 수익성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노리면서 일시적으로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라고 불렀다. 이자율이 낮아서 채권가격이 높다면 사람들은 이자가 곧 오르고 채권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권을 팔고 화폐를 보유한다. 화폐수요와 이자율이 반비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 때문이다.

평가절하 / 절상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정책당국이 자국의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환율을 변화시키는 경우 환율이 평가절하(devaluation)되었다고 하며, 반대로 자국의 화폐가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환율을 변화시키면 환율이 평가절상(revaluation)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1달러=900원이었던 환율을 1달러=1,000원으로 올리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평가절하)한다. 원화가 평가절하되면 수출품의 외화표시 가격이 내려가 수출 증진이 기대되지만,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필립스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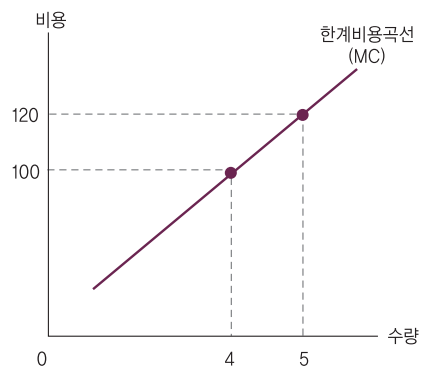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필립스가 1861년부터 1957년 사이의 영국의 통계를 검토한 결과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후속 연구에서도 비슷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실업률이 높을 때는 물가상승률이 비교적 낮고, 실업률이 낮을 때는 물가상승률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한계비용

재화나 서비스를 1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연필 4자루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연필 1자루의 생산비용은 25원이다. 만약 추가적으로 1자루의 연필을 더 생산하여 총 5자루를 생산한다고 할 경우의 생산비용이 120원이라면, 한계비용은 (120원-100원)=20원이 된다.

$$\text{한계비용(MC)} = \frac{\text{총비용의 변화량}}{\text{산출량의 변화량}}$$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한계비용도 증가한다. 따라서 한계비용곡선은 그림과 같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띈다.



한계생산체감의 법칙

한계생산성(marginal product)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1단위가 더 투입될 때 증가하는 산출량의 증가분을 말한다. 근로자가 1명일 때 100개의 산출량이 만들어지는 재화가 있다고 하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근로자 1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근로자는 2명이 되었고, 2명의 근로자가 생산한 재화의 산출량은 190개가 되었다. 이 경우 한계생산성은 90개 (=190-100)다. 한계생산성은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분에 비례하여 항상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량 이상의 생산요소가 투입되면 오히려 한계생산이 감소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100명이 일할 수 있는 공장에 110명을 투입하면 일하는 공간이 부족하고 서로 작업도구를 공유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추가 투입에 비례하여 생산물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또한 1시간에 10개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근로자를 24시간 연속 근무시킨다고 하여서 240개의 재화가 생산되지도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소모되고 집중력이 흐트러져 시간당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계소비성향

소득증가분에 대한 소비증가분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를 늘리지만, 일부는 저축을 하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 형태와 경기상황 등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한계소비성향은 전체 소득에 대한 전체소비의 비율인 평균소비성향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계수입

생산자가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다팔면 이득, 즉 수입이 발생한다. 총수입(Total Revenue, TR)은 시장가격에 판매량을 곱한 값이다. 총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누면 평균수입(Average Revenue, AR)이 되며, 평균수입은 재화의 시장가격과 같다.

$$\begin{aligned}\text{총수입(TR)} &= \text{시장가격(P)} \times \text{판매량(Q)}, \\ \text{평균수입(AR)} &= \frac{\text{총수입(TR)}}{\text{판매량(Q)}}\end{aligned}$$

반면 재화나 서비스를 1단위 더 판매함으로써 생산자가 얻는

총수입의 변화를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MR)이라고 한다.

$$\text{한계수입(MR)} = \frac{\text{총수입의 변화량}(\Delta TR)}{\text{판매량의 변화량}(\Delta Q)}$$

완전경쟁시장내에 존재하는 생산자의 평균수입(AR)과 한계수입(MR)은 재화의 시장가격과 일치한다.

한계효용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한다. 소비자는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단위의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한다. 이때 추가로 재화나 서비스를 1단위 더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 즉 효용의 변화가 한계효용이다. 표는 한 사람이 사과를 소비할 때 느끼는 효용의 크기와 변화를 나타낸다. 사과 1개를 먹었을 때 느끼는 총효용은 10이며, 추가적으로 사과를 소비할 때 느끼는 총효용은 각각 18, 24, 28, 30, 30, 28이다. 한편 추가로 사과를 소비할 때 느끼는 한계효용은 각각 10(=10-0), 8(=18-10), 6(=24-18), 4(=28-24), 2(=30-28), 0(=30-30), -2(=28-30)다.

| 사과 개수 | 효 용 | 한계효용 |
|-------|-----|------|
| 0 | 0 | - |
| 1 | 10 | 10 |
| 2 | 18 | 8 |
| 3 | 24 | 6 |
| 4 | 28 | 4 |
| 5 | 30 | 2 |
| 6 | 30 | 0 |
| 7 | 28 | -2 |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소비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비한다. 또한 최대의 만족을 느낄 때까지는 소비 단위가 증가할수록 느끼는 효용도 증가한다. 이때 재화를 1단위 더 추가로 소비할 때의 효용의 변화량을 한계효용이라고 한다. 한계효용은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작아진다. 어떤 사람이 배가고파 사과를 먹었다고 하자. 이 사람은 배가고픈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 사과를 먹었을 때 상당한 만족(효용)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1개 이상의 사과를 소비하면 점차 배가 불러와 처음 사과를 먹었을 때 느꼈던 만큼의 효용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소비를 통하여 먹은 사과와 개수는 늘어났지만, 개수가 늘어날수록 효용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를 늘려감에 따라 추가로 얻게 되는 효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환율

자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교환비율을 말하며,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외환의 공급이 수요보다 커지면 외국통화에 대한 환율이 하락하고, 수요가 공급보다 커지면 환율은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여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절하(depreciation)' 라고 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절상(appreciation)' 이라고 한다. 외국과의 거래 결과 달러화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달러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여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강세)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미국 시장에서의 상대가격은 상승하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수입품의 상대가격은 하락한다.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업자는 수출의 대가로 예전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므로 불리해지는 반면, 수입업자는 더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유리해진다.

희소성(scarcity)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 이를 충족시켜주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 경제적 의미의 희소성이란 무엇인가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인간의 필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희소성은 경제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된다.

GDP 디플레이터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백분비를 말한다. 기준연도에는 명목GDP와 실질GDP의 값이 같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 된다.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크면 물가가 상승한 것이며, 100보다 작으면 물가가 하락한 것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GDP를 기반으로 측정된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489개 품목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나,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15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에 비하여 가장 광범위한 물가지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물

가지수와는 달리 GDP 디플레이터에는 수입품이 제외되는 차이점이 있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의 안정적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 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1945년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다. 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 공여 등의 활동을 주로 한다. 2010년 현재 가입국은 186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하여 있다. 운영자금은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 국제준비금 보유량 등에 따라 가맹국 정부의 출자로 이루어진다. 각국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의결권과 IMF 자금의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출자금은 금과 자국 통화로 지불되어 왔으나, 1978년 신탁정 체결로 금에 의한 납입은 제3의 통화인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로 대체되었다. IMF는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과 개별시장에 대한 연구와 통계 자료 수집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미래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 정부와 중앙은행에 정책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 IMF는 외화자금이 부족하거나 외화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회원국을 돕기 위하여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개도국 발전을 위한 특별신탁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초기 IMF의 기능은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에 있었지만, 변동환율제 채택 이후 그 기능이 변화하여 현재는 개도국 및 구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에 치중하고 있다.

J커브효과

환율과 경상수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다. 경상수지 개선을 위하여 자국통화 가치를 하락(환율상승)시키더라도 경상수지는 즉시 개선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악화되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개선되기 시작한다. 이때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경상수지의 모습이 알파벳 J의 모습과 흡사하여 J커브라고 한다. 대부분의 수입과 수출은 미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경상수지는 악화되지만, 시간이 지나 수출입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맞추어 수출입 물량이 조절되고 나면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

국제석유자본(석유 메이저)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1960년에 주요 석유 생산·수출국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1960년 9월 원유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라크 정부의 초청으로 개최된 바그다드회의에서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수출국 대표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로 시작되었다. 1950~1960년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대형 유정이 발견되어 원유의 공급 과잉 사태가 일어났고 원유가가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일종의 카르텔과 같은 결속체를 통하여 공시가격의 회복과 인상을 주도하였다. 결성 당시에는 원유공시가격의 하락을 저지하고 산유국 간의 정책협조와 이를 위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 카르텔 성격의 기구였다. OPEC은 1973년 제1차 석유위기를 주도하여 석유가격 상승에 성공한 후부터 원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량을 조절하는 생산 카르텔로 변질되었다. 회원국들은 원유가격 인상과 더불어 석유시장 국유화로 오일 머니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거액의 재정자금을 확보한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경제 개발 사업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축적된 외화를 국제금융시장에 공급할 정도로 국제금융질서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OPEC은 가격정책 이외에 석유 이권의 국유화, 자원보호, 각종 석유 산업으로의 진출, 석유시대 후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회원국은 아프리카의 알제리, 앙골라, 나이지리아, 리비아,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중동의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12개국이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기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 정도를 감시하기 위하여 1995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2010년 현재 회원국은 153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WTO는 총회, 각료회의, 무역위원회, 사무국,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보다 자유로운 무역과 예측 가능한 무역을 지향하고 국제·국가 간 통상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통상 분쟁의 해

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통상 분쟁의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WTO의 규제를 받게 된다. WTO는 다자간 무역에서 무역장벽을 철폐 또는 폐지함으로써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반하여, FTA는 협정 체결 당사국에게만 혜택을 주는 배타적 특혜무역협정이다.